

# IMF 자금 지원이 농업 부문에 주는 시사점

윤호섭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부는 1997년 11월 21일 IMF(국제통화기금)에 유동성 조절자금(통상 국제금융이라고 함)을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12월 3일 IMF와의 협상 결과를 발표하였다. 주요 합의 내용은 1998년의 경제성장률을 3% 수준(1999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 회복)으로 하고, 물가상승율은 5% 이내로 하며, 경상수지적자를 국내총생산의 1% 이내로 유지하고, 금융 부문 구조조정을 위하여 금융개혁법안을 금년 내로 통과시키고 금융 부문의 개혁 조치를 단행하며, 자본 자유화를 가속화하고,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구조를 개선하며,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IMF는 국제금융의 신청 국가에 대하여 주요 경제정책의 방향과 경제지표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신청국은 통상 IMF의 의견을 따르게 된다. 이는 경제정책의 운용상 IMF의 간섭을 받게 됨을 의미하며, 바로 이 점 때문에 일부에서는 경제주권의 IMF 위임 또는 IMF에 의한 경제의 신탁통치라고 표현하였다. 더욱이 합의 내용에 미국과 일본의 요구사항이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불만이 제기되었고 또한 합의 내용이 우리 경제에 너무 가혹하다는 평가가 국내외에서 나오면서, IMF와 재협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대두되었다.

이러한 불만과 재협상론의 대두는 IMF는 물론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에게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현재의 금융 위환위기를 수습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안요인을 가중시켰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IMF에 자금을 요청한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IMF와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IMF의 자금을 이용하여 현재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IMF간의 합의 내용중 농업 부문과 관련된 것은 정책금융은 유지하되 이자손실은 예산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간단한 언급밖에 없으나, 이 합의사항이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합의내용을 기초로 농업 부문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농업부문에 미칠 첫 번째 시사점은 세출삭감과 세입증대라는 재정긴축과 관련된 문제이다. 정부지출이 삭감될 경우 농업 부문 예산이 감축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농업부문이 투자 효율성이 낮은 분야로 인식되고 있고, 현재의 위기 상황을 단기간 내에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우세할 것이기 때문이다.

농업 부문 예산이 감축된다면, 농업성장은 위축되고 농촌경제도 침체될 것이다. 따라서 농업부문이 해야 할 일은 경제여건이 어려울수록 농업과 농촌경제의 활성화가 사회 안정과 결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농업 예산은 감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배합사료의 제조원가중 재료비의 비중은 77% 수준이고 배합사료 원료의 수입의존도는 96% 정도이므로 환율상승율의 74% 정도만큼 배합사료 가격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따라서 환율이 50% 정도 인상될 경우 배합사료의 인상요인은 37%가 발생한다.**

는 논리와 인식을 확산시켜야 하는 일이다. 이와 함께 농업 부문 내 부적으로는 예산 감축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 재정과 관련한 또 다른 시사점은 세입 증대 문제이다. 세입 증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의 축소 및 폐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농업부문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조세감면규제법 99조에 따라 농업용 유류나 축산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폐지될 경우 농업용 유류나 사료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현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 농업용 유류 부문의 세제 혜택은 2,800억원 그리고 사료에서 3,400억원 정도의 세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리고 농협 등 협동조합의 중앙회와 단위조합이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비료와 농약 및 생활물자 사업 등이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감면조치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농업생산비가 상승하고 협동조합의 판매사업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농업 부문은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다음은 물가 상승률을 5%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조항이 주는 시사점이다. 물가안정은 IMF와의 합의사항이 아니더라도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은 물가안정이 강력히 시행될수록 항상 농산물 가격의 안정이 우선시되어 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물가안정을 위하여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 시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특히, 농산물 수입이 거의 개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의 안정차원에서 농산물 수입이 증가할 수도 있으며, 전반적으로 수입관세의 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농산물의 수입관세도 영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 농업의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 재정긴축과 저성장에 따른 실질소득의 감소와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실업의 증가는 전반적인 구매력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농산물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득 감소는 육류와 신선과채류 등 소득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의 소비를 감소시킬 것이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외식부문의 지출부터 감소될 것이다. 외식 산업의 주류가 육류인 점을 감안할 때, 축산물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마저 축소 또는 폐지된다면, 사료비는 상승하고 따라서 축산물 생산비도 증가할 것이다. 즉, 축산업계는 수요는 위축되고 생산비는 상승하며 수입은 확대되는 3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소득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곡물의 소비는 약간이나마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특히,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쌀 소비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농업생산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환율이 평가 절하됨에 따라 원화로 표시된 단위물량당 농산물 수입금액은 증가할 것이며, 특히 농업용 원자재의 수입금액 증가는 농업 부문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사료가격의 상승으로 축산물 생산비의 증가가 예상되나 축산물 가격의 상승에는 한계가 있

**축산업이나 시설채소 재배업 등 비교적 자본 투입이 많은  
 업종들일수록 외부자금의 차입이 많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금리는  
 상향조정될 것이며, 따라서 외부차입이 많은 농가일수록 금리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즉, 농민들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 금리부담의 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저하되는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을 것이므로 축산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즉, 배합사료의 제조원가중 재료비의 비중은 77% 수준이고 배합사료 원료의 수입의존도는 96% 정도이므로 환율상승율의 74% 정도만큼 배합사료 가격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따라서 환율이 50% 정도 인상될 경우 배합사료의 인상요인은 37%가 발생한다.

1996년말의 1달러당 원화의 환율은 844원이었으나, 금년 12월에는 환율의 변동 폭이 심하기는 하나 1400 ~ 1500원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즉, 작년말 대비 환율은 이미 60% 이상 상승하였으며, 이는 배합사료 가격의 상승을 동반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외화 유동성의 부족과 무역 금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배합사료의 원료인 사료곡물의 수입이 원활하지 못하여 배합사료 시장에서 거래의 형태가 현금거래 위주로 전환되고 배합사료의 구입에도 일부 차질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축산 농가가 소 등을 투매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며, 단기적으로 산지 축산물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 이와 같은 농업용 원자재 수입액의 증가는 비료와 농약 등 농업용

원자재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비료와 농약 생산중 수입원가 비중은 각각 40%와 60%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환율 인상은 비료와 농약 등 농업용 원자재의 수입가격을 인상시키고, 이에 따라 비료와 농약 가격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농산물 생산비를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위축에 따른 소득의 감소로 인하여 농산물 소비가 위축될 전망이고 물가안정이라는 정책적인 사항들을 고려할 때,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의 증가분 만큼 상승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여건은 악화될 것이며, 따라서 농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반면에, 환율 상승은 수입농산물 가격의 상승을 동반하면서 수입농산물의 소비는 감소되는 긍정적 인 측면도 있다. 즉, 환율이 50% 정도 상승한다면, 수입농산물의 가격도 50%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수입농산물의 소비는 위축될 것이 예상된다.

예를 들면, 1996년의 치즈 수입이 4,800만불 정도임을 감안할 때, 치즈와 낙농품 등 소득탄력성이 높은 수입농산물의 소비는 위축될 것이다. 물론, 주류와 담배 등 기호품

의 수입도 감소될 전망이다.

▣ 다음은 농업경영여건의 악화에 따른 농업생산의 수익성 저하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농산물 생산비의 증가가 예상되나 물가안정 기초를 유지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농산물 가격의 상승에는 한계가 있고 따라서 농산물 생산의 수익성은 저하될 것이다.

특히, 축산업이나 시설채소 재배업 등 비교적 자본 투입이 많은 업종들일수록 외부자금의 차입이 많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금리는 상향조정될 것이며, 따라서 외부차입이 많은 농가일수록 금리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즉, 농민들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 금리부담의 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저하되는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IMF와의 합의사항에 따라 수입선다변화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이며, 이는 농기계 업체에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수확 탈곡 겸용기(콤바인)가 수입다면 화품목으로 묶여 있었으나, 이 제도의 폐지로 일본산 콤바인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기계업체는 콤바인 생산에 있어 아직도 일부 핵심 부품을 일본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 비농업부문에서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중 일부는 농촌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귀농인력이 현재 농업 부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장치도 검토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본의 콤팩인 생산업체들이 국내 업체와의 제휴관계를 청산하고 국내 시장에 직접 진출할 경우 국내 콤팩인 생산업체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다.

▣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도 용이하여 질 전망이다. 1997년 현재 농업 부문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제한된 업종은 곡물 도정업, 육우 사육업, 고기 도매업 및 보통작물 생산업 등 4개 업종이다. 그러나 보통작물 생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업종은 2001년 1월까지 개방될 예정이다. 이번 IMF와의 합의를 통하여 외국인의 주식투자 한도가 50%까지 확대되는 등 주식시장이 완전히 개방되고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인수·합병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농산물 유통 및 가공 부문에 대한 외국자본의 진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도 일부 외국 유통업체가 일부 지역에 진출하여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을 감안할 때, 자본력이 크고 경영기술이 탁월한 외국 유통자본이 농산물 유통 및 가공 분야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도축업의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된 상태에서 고기도매

업까지 자유화된다면, 도축업으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 자본이 가공 등 고기 유통업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은 IMF에 유동성 자금을 신청하기 이전에도 존재하였다. 다만, 외국 자본의 국내 금융업 진출이 가능하여짐으로써 외국자본은 국내시장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농협과 축협 등 농업금융기관에도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회생 불가능한 금융기관은 폐쇄되어야 하고, 회생 가능한 금융기관은 구조조정과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농업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도 국제결제은행 기준인 위험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8%를 상회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국내 은행들의 수입업체에 대한 신용장 개설 거부 사태도 국제결제은행의 권고 기준과 관련되어 있다.

즉,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은 신용장 금액의 일부를 위험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은

행들은 국제결제은행 기준인 위험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신용장 개설을 거부 하였던 것이다. 이 결과 사료업체도 사료곡물의 도입을 위한 신용장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사료업체는 정부에 미국의 단기수출 신용보증(GSM-102)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국내 금융기관들은 최대 문제점인 부실채권은 물론 유가증권 평가손에 대한 충당금 적립도 국제기준에 따라야 하며, 여기에는 농협과 축협도 해당된다. 이에 따라 농업금융기관들도 국제결제은행 기준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하며, 이러한 기준에 미달될 경우 금융부문 조정과정에서 타금융기관과 통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1997년 12월초의 일부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일시 영업정지 조치는 금융산업에 대한 구조개편의 신호로서 금융부문 개편의 강도를 짐작케 하는 것이다. 또한 IMF는 우리 정부에 통합된 금융감독기구의 설립을 요청하였으며, 따라서 통합금융감독기구가 출현할 경우 농협과 축협 등 농업금융기관들은 공제와 상호금융 까지 포함하여 신용사업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감독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 부문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농업 부문에 미칠 파장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농업 부문 종사자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정부내에서 농업 부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타부처와 씨름하고 있는 농림부에 힘을 실어 주는 일이야말로  
농업 부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자본시장의 자유화가 가속화됨으로써 농업금융기관들은 금리와 환율 및 주식가격 등 주요 경제변수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자금운용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단기금융상품시장의 개방으로 단기금융 시장의 불안 가능성이 증폭될 수 있으며, 국내의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 예상됨으로써 농업금융기관들의 영업환경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 이외에도 유통과 관련된 국내 자본은 물론 외국 자본도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에까지 진출할 것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협동조합의 경제사업에도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협동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혜택이 축소 또는 폐지될 경우 협동조합이 취급하는 품목의 가격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며, 이 경우 협동조합의 구매 및 판매사업의 경쟁력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리고 기업자금조달의 은행 차입비중을 축소하기 위한 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농업자재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종묘업, 농약제조업 및 농기계 제조업 등 농업자재업체들의 상당수는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IMF와의 합의사항

에 따라 금리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따라서 부채가 많은 일부 농업용자재 제조업체들의 금리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 고도성장을 유지하여 오던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1998년에 3%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우리는 처음으로 대량 실업 사태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농업부문에서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중 일부는 농촌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귀농인력이 현재 농업 부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장치도 검토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 이상에서 언급한 사항들은 정부와 IMF간의 합의 내용중 농업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들에 기초하여 검토해 본 가능성일 뿐이다. 이러한 가능성중 어느 정도가 현실로 나타날 것인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농업 부문 예산의 감축이나 농업 부문에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문제도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외국자본의 농업 부문 유입이나 금융산업 구조조정 문제 등의 유폴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현재

상황에서 예상 가능한 문제들을 검토해 본 것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농민은 농민대로 영농을 영위한다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현재 IMF와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간에 조율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농업 부문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농업 부문에 미칠 파장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농업 부문 종사자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정부내에서 농업 부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타부처와 씨름하고 있는 농림부에 힘을 실어 주는 일이야말로 농업 부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

(필자연락처 : 02-962-7312)

